



주간 통일정세

2012-3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리영호 총참모장 신병관계로 해임"(종합)(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5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는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리영호가 총참모장에서도 해임됐는지, 후임자가 정해졌는지는 밝히지 않음.

- **北현영철 차수 승진...리영호 후임 가능성(종합2보)(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현영철 인민군 대장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현영철의 차수 승진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명의로 나왔으나 현영철이 전날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것으로 발표된 리영호 총참모장의 후임인지는 밝히지 않음.

- **직업총동맹 대표자회 개최(7/18, 노동신문)**
 - 노동당 외곽조직 가운데 하나인 직업총동맹(직총)이 17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대표자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함.
 - 신문은 직총 대표자회에서 직총 규약이 개정됐다고 전했지만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직총 대표자회에는 김기남 당 선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현상주 직총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함.

- **北 '리영호 숙청' 김정은에 '원수' 칭호(종합)(7/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북한매체들이 일제히 전함.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힘.

- **北김정은, 정치범 가족 연좌제 완화 지시(7/18,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치범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3월27일자 김정은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김 제1위원장이 "범죄자 한 명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족, 친척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십명, 심지어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까지 처벌체계를 비판했다고 전함.
 - 또 김 제1위원장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추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령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의 인덕 정치의 큰 그릇에 전부 넣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교양 개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 **농업근로자동맹 대표자회 18일 열려(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대표자회가 18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농근맹의 과업과 농근맹 규약개정에 대한 의정이 결정됨.
 - **北김정은 예고없이 순안공항 '깜짝방문'(7/19,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교통통제나 삼엄한 경호 조치도 없이 순안공항을 '깜짝 방문'해 공항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평양을 방문한 재미교포 A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7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국행 여객기를 기다리던 중 항공사 직원에게서 '김 1위원장이 4일 공항을 불시 방문해 공항 관계자들이 크게 긴장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5일 김 1위원장이 평양항공역(순안공항) 개건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간략히 보도했으나 "김 1위원장을 현지에서 공항 일꾼들이 맞았다"고 전했을 뿐 불시방문 사실이나 수행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北원로 리을설 원수, 김정은 원수에 충성맹세(7/19, 노동신문)**
 - 북한에서 김 1위원장을 제외하면 유일한 원수인 리을설 전 호위사령관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19일 김 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함.
 - 리을설은 19일자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동지는 곧 우리 조국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며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도 일편단심 그이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받드는 데서 혁명의 1세대로서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맹세함.
 - **북한 인민군, 충성 맹세 결의대회(7/19, 조선중앙통신)**
 - 18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공화국 원수'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을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신임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모였으며 행사에서 현영철은 군부를 대표해 "김정은 원수의 두리(주위)에 뭉쳐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인민군 장병의 최대 사명이고 본분이며 의무"라며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이라고 맹세함.
 - 같은 날 조선인민내무군도 김 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행사에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은 "조선인민내무군 전체 장병은 수령 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인민보안사업의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함.
- 리영호 해임은 정상적 당권행사(7/19,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최근 북한의 리영호 전 총참모장 해임은 정상적인 당권 행사라며 '숙청설' '당과 군부의 대립' 등을 제기한 외국 언론의 보도를 비난함.
 - 조선신보는 이날 '당정치국 회의, 독단에 기초한 억지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당규약에 따라 해당한 절차를 밟고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군 총참모장의 직무해임이 결정된 것은 정상적인 당권의 행사"라며 "이 사실을 두고 '체제불안'의 요소를 찾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리영호 해임이 군과 당의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당과 군대를 조직적으로 대치시키는 제도나 질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군대 안에는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만 인정되고 있다"고 반박함.
- 北 김정은 어머니 묘 설치·실명 공개(7/20, 마이니치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故) 고영희의 묘가 평양 시내에 설치되고 묘비에 실명을 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경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고영희의 묘가 생일인 지난달 26일 전후 평양시내 대성산 부근에 설치됐다고 전했으며 석조 묘의 묘비에는 고영희의 사진과 함께 "선군조선의 어머니" "고영희"라는 문자가 한글로 새겨져 김 제1위원장의 모친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
 - 또 "1952년 6월 26일 출생, 2004년 5월 24일 사망"으로 생년월일과 사망일도 처음으로 명확히 했으나 묘비에 고영희가 일본 출신이라는 것은 기록되지 않음.
- 평양서 '김정은 원수' 추대 경축행사(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19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20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에서 김 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하는 내용이 담긴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달함.
 - 이어 최태복 당 비서, 윤동현 사장, 직총중앙위원회 현상주 위원장, 농근맹중앙위원회 리명길 위원장,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전용남 위원장 등이 각각 당과 군장병,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청년학생 등을 대표해 발언하고 결의문을 채택함.
 - 대회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총정치국장, 현영철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 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국태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이명수 인민보안부장, 오국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당·군·정의 고위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함.
- **北현영철 신임 총참모장 주석단 서열 5위?(7/20,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20일 평양시체육관에서 전날 열린 '김정은 원수' 추대 경축행사 소식을 전하며 주석단 고위간부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순으로 소개함.
 - 북한 매체는 보통 주석단을 공식적인 권력서열 순으로 호명하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포함하면 현영철은 주석단 서열에서 5위에 해당함.
 - **北 김정은, 조직 만들어 경제개혁 추진(7/20, 연합뉴스)**
 -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변화에 반대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해임하고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과 중국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20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북한 내각이 1990년대의 극심한 기근 이후 황폐화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군부로부터 경제 통제권을 가져올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과거 내각은 경제 분야에 권한이 없는 껍데기였다. 군이 경제를 통제했었지만 이제 바뀔 것"이라고 말함.



■ 김정은동향

- 7/18, 김정은 제1위원장, 김책공업종합대학 지도교원 김원일 등 모범적 강연강사들에게 '감사' 전달(7.18,중방)
- 7/18,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 수여(7.18.12:00,중·평방·중통)
 - 黨 중앙총·黨 중앙군사총·국방총·최고인민회의 상임총, 7.17 결정
 - 인민군 장병들, 7.18 '총성맹세 결의대회' 및 경축무도회(4.25문화회관 및 광장) 진행(7.18,중방·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현영철(총참모장)·김정각(인민무력부장)·현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박재경(총정치국 부국장) 등 참석
 - 현영철을 총참모장으로 호칭, 인민군 총참모장 임명 확인
 - 내무군 장병들도 7.18 '총성맹세 결의모임' 및 경축무도회 진행(7.18,중통·중방)
 - 리명수(인민보안부장)·윤희환·리히수(장령)·김철훈(사관) 등 참석
 - 전국 방방곡곡 거리와 마을마다 "민족의 대경사를 맞이한 환희가 끊어 넘치고 있다"고 '김정은 웅위 분위기' 고조 선전(7.18,중통)
 - 현기청·최학민(장령)·남길(군관)·한순녀(군인) 등 군인들, "최대의 영광, 총대로 굳건히 보답" 등 "총정 맹세" 반향(7.18,중통)
 - 최고인민회의 강윤석(부장)·조원철(부부장)·김갑송(과장), "총직하게 받들 것" 반향(7.18,중방)
 - 중·평방과 중통을 통해 12시"중대보도"예고 및 라디오방송 3회 반복 보도
- 7/20, 김정은 제1위원장, 경공업성 일꾼 근로자 등에게 감사 전달(7.20,중방)
- 7/20, 김정은, 7.20 총련지부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7.20,중통·중방)
- 7/21, 김정은, 7.21 故 설명순(인민군 협주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7.21,중통·중방)
- 김정은 제1위원장, 100살 장수자 '김관옥'황남 은률군 산승리 17 인민반)에게 생일상 전달(7.22,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군사위·국방위, 7.16 '현영철'(前 인민군대장)에게 '조선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결정(7.17,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정령, 駐리비아 대사에게 황형철 임명(7.18,중통·중방)
- 北, 7.19 김정은 원수칭호 수여 평양시 경축대회(평양체육관) 진행(7.19,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평양시당책/사회), 광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영웅들, 공로자들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7.19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7.19,중통·중방)

나. 경제

● 北 홍남비료공장, 2014년까지 배로 증설(7/20, 신화통신)

- 북한 최대 화학비료공장인 함경남도 함흥시 홍남비료연합기업소가 2014년까지 생산능력을 배로 늘리는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홍남비료연합기업소는 갈탄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해 비료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가스화 1공정 건설을 지난해 11월17일 마무리하고 연간 35만t의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현재 진행 중인 2공정 건설을 2014년까지 끝내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연간 70만t으로 확충할 계획임.

● 북한, 신경제정책 10월 시행 전망(7/22, 산케이신문)

-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볼 수 있는 신경제정책을 이르면 10월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일본 내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등이 북한 노동당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힘.
- 신문은 '6.28 방침'으로 불리는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국가 투자와 시장 가격 등의 도입 등으로 표면상 개혁개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中 첫 합작영화 '아리랑' 내달 3일 中 개봉(7/16, 연합뉴스)**
 - 첫 북·중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원제 아리랑)이 내달 3일 중국에서 개봉된다고 이 영화의 중국측 감독인 시르자트 야킵이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태권도시범단 올여름 방미 무산(7/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 계획이 최근 미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무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지난해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도왔던 조지 비탈리 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으로 계획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 일정이 취소됐지만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광범위한 감시로 체제 유지(종합)(7/19, 연합뉴스)**
 - 북한이 광범위한 감시망에 의존해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9일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앤드류 나치오스 HRNK 공동의장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가 부여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감시 기관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항하거나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 숙청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황해도에 폭우...강령군 229mm(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황해남북도 지역에 장마전선과 태풍 7호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18일 0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229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벽성군 226mm, 재령군 192mm, 웅진군 181mm, 신천군 170mm, 신원군 167mm, 해주시 166mm의 강우량을 각각 기록했으며 황해북도의 경우 은파군에서 200mm, 황주군에서 158mm의 비가 내림.
- **北 "태풍 '카눈'으로 7명 사망...농지 침수"(7/20, 조선중앙통신)**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주민 7명이 사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서 7명이 사망하고 원산시, 문천시에서는 상수도망이 완전히 파괴돼 식수공급이 끊겼으며 해주시와 재령군에서는 가옥 다수가 파괴됐고 은천군에서는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전함.
- **北 "새 아리랑공연 프로그램 준비"(7/22, 연합뉴스)**
 - 북한이 대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리랑공연 국가준비위원회의 김금룡 연출실장이 21일(현지시간) 밝혔



- **북중무역 28% ↑ ... "北 무연탄 팔아 생필품 수입"(7/20, 연합뉴스)**
 - 지난해 급증했던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이 올해 상반기에도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상기 전문위원은 20일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 동향 분석'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북한이 외화 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지하자원 수출에 집중함에 따라 북중 무역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함.

- **北, 中 화시촌 고급호텔에 女종업원 파견(7/20,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의 유명 부자 마을 화시(華西)촌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여성 종업원들을 파견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0일 복수의 화시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북한인 여종업원 20~30여명이 룡시(龍希)국제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는데 룡시호텔은 화시촌 주민들이 30억 위안(약 5천370억 원)을 투자해 만든 74층짜리 5성급 호텔로 작년 11월 중국 안팎의 큰 조명을 받으며 개업함.

- **中, 북한군 탈출 대비 국경경비 강화(7/22, 요미우리신문)**
 - 중국군이 북한군 병사와 항공기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 뉴스센터'를 인용해 중국군이 지난 17일부터 북한 병사와 항공기의 탈출을 막으려고 조기경보기 4대를 북-중 접경지대에 증파해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일본 수상직속 위원회의 '미래생존전략 보고서'(집단적자위권행사 용인) 발표 관련 "일본이 자국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분쟁문제들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7.18, 중통·민주조선/평화 국가의 허물을 벗는 일본)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7.20)】 탈북자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미국의 구태의연한 對北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긴장격화 되풀이, 비핵화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책임 전가하며 '핵문제 전면 재검토' 위협(7.20, 중통·중방)
 - 중앙통신사 논평, 7.20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선전과 파괴암해책동 더욱 노골화, 北의 일심단결과 수령결사옹위방선은 난공불락'이라고 주장(7.20, 중통/정치테러분자들은 오관하지 말라)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성명(7.16), '韓美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은 '탈북자'들이 北에 침투하여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다 적발되어 체포되었다'며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테러사건, 국가정치테러사건'이라고 주장 및 '무서운 징벌' 위협(7.16,중통·중방)
- 제2차 외교·국방장관회담, 한-일 군사협정체결 추진 관련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은 거래를 핵전쟁의 제물로 삼겨바치는 쓸개빠진 망동'이라며 再次 '매국반역의 길'이라고 비난(7.16,중통·노동신문/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은 더없는 역적행위)
- 北 주장 탈북자 테러범 '전영철', 7.19 내외신 기자회견(인민문화공전)을 통해 '「동까모」(김일성동상을 까는 모임)와 南정보기관 연계 및 美 사주를 받고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하나원 교육후 2011년 3월부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했다'고 소개(7.19,중통·중·평방·조중TV)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4호, 李 대통령 통일발언(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 등) 및 통일부 '통일항아리' 기부 관련 '체제대결의 허황한 망상을 드러낸 도발적 악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정신병자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고 비난(7.19,중통·중방)
 - 통일재원 기부 관련 '통일항아리는 체제대결정책을 여론화할 목적 밑에 조작해냈던 통일세의 복사판, 총파산에 직면한 대결정책의 실패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술책'이라며 "역적패당의 위험천만한 반공화국 대결음모가 담겨져 있다"고 왜곡 비난(7.19,중통/통일항아리에 담겨진 남조선당국의 음흉한 기도)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통일부 대변인의 '탈북자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北 주장은 사실무근 등)에 대해 "또 하나의 추악한 모략행위"라며 '제2·3의 전영철을 만들려 한다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극언(7.21,중통)
- '北주장 테러범 전영철' 관련 '우리(北)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려 한 이OO역적패당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려야 한다'며 '애국성전에 떨쳐나설 것'을 선동(7.22,중통·노동신문·중방/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 '이번 테러사건이 당국의 개입 없이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되어 꾸며졌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천하의 음모꾼, 모략꾼, 범죄의 왕초'라고 비난(7.22,중통·노동신문·중방/통할 수 없는 서툰 연극)
 - 리년용(최고재판소 국장)·길명복(최고재판소 판사)·김준걸(최고검찰소 국장) 등, '전영철' 주장 관련 韓美 비난 반향(7.22,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사일 기술 확보시도 북한인 우크라이나 복역"(7/19)

-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다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2명이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검찰 관계자는 "북한인 2명에 각각 8년형을 선고한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 법원의 판결이 발효됐다"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로부터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함. 우크라이나 검찰은 당초 법원 판결 이후 북한 정부나 정보당국이 자국민 인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힘. 그는 "북한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스파이 활동에) 실패했으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라는 식"이라고 전함. 앞서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에서 현지 로켓 발사체 개발 전문 설계사무소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극비기술을 빼내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돼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았음.
- 벨라루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류성철과 이태길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7월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의 한 차고에서 '기밀' 분류 표시가 된 우크라이나 학자들의 박사 논문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도중 현장에서 체포함. 이 논문들은 첨단 로켓 기술과 우주선, 액체 연료 엔진, 로켓 연료 공급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었음. 이후 수개월에 걸쳐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은 북한인들은 현지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음.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도했던 자료를 손에 넣었더라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함.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들은 당초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국자 "北 '핵문제 재검토', 대미 압박용"(7/20)

-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문제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 문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다소 수동형 문장을 쓰고 있다"면서 "이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북 제재 국면 해소를 위해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함. 탈북자 출신 전영철씨가 남한 정보기관과 미국의 시주로 김일성 동상



파괴를 기도하다 체포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로 하여금 핵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이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해임 등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정부와 사회에서 일어난 인사이동의 행간(의도)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면서 냉소적 태도를 보인 것도 북한을 자극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봄. 그는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추가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에도 주목했다. 그는 "북측이 동상 문제를 걸고넘어졌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나. 중·북 관계

● 北 "南·美 지령 받은 테러행위 적발"(7/16)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남한과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침투한 '테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얼마 전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됐다"며 "범죄자들은 월남도주자(탈북자)를 비롯한 반역자들로서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이 던져주는 돈에 매수돼 불순한 파괴압해책동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사건이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중대 국가정치테러 사건"이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그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은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가리킬 때 사용함. 대변인은 "만일 미국과 괴뢰패당이 특대형 테러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 하여 초래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중·북 관계

● 北, 中 투자 유치 노력 강화...각종 우대정책 소개(7/19)

-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류 중단조치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중국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음.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의 베이징 사무소인 조선투자사무소는 18일 중문판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과 근로자 고용 조건 등을 제시함.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투자사무소는 합영투자위원회가 해외에 설립한 유일한 사무기



관이며 외자 유치 이외에 문화·과학·기술의 대외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 "외자기업 中근로자에 아무런 제한 없어" = 조선투자사무소는 이날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자주 겪는 문제'란 제목의 글을 올려 외국인 투자 조건을 문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함. 북한 내 근로자 고용 조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0유로(약 4만2천원)이며 외자기업은 근로자 1인당 매년 7유로(약 9천800원)의 사회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소개함. 연장 근로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하면 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조선투자사무소는 특히 외자기업의 중국 측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음. 현재 120여개 한국 기업이 입주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약 12만5천원)임.
- ◇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 = 세금 우대 정책으로는 외자기업의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와 합작기업이 아닌 경우 수출품에 대한 관세, 광산 개발 시 자원세를 모두 면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음. 1㎡당 1유로(약 1천400원)인 토지사용세는 북한이 부담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지하자원 채굴의 경우 매년 채굴량에 제한이 없다고 소개함. 북한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 이윤의 25%로 정하고 영업세는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호텔, 오락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입액의 2~10%를 징수한다고 밝힘. 외자기업의 주된 고려 요인인 전력은 1천kW당 0.053유로(약 94원)에 공급하며 상표권은 기업에 귀속되고 상품 가격은 북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전함.
- ◇ '北 외자 유치 창구' 합영투자청은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2010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에서 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조직임. 그동안 나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음. 정부 당국은 북한의 외화벌이 주체를 크게 내각, 군부, 합영투자위원회, 대풍국제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러 무역회사나 기관이 대체로 이들 네 그룹에 속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합영투자위원회는 지난 3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유리하게 변화되는데 따라 합영·합작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풍부한 희토류 광물자원과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대규모 투자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힘.

● 북·중 무역 28%↑... "北 무연탄 팔아 생필품 수입"(7/20)

- 지난해 급증했던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이 올해 상반기에도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상기 전문위원은 20일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 동향 분석'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북한이 외화 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지하자원 수출에 집중함에 따라 북중 무역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함.
- 1~5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증가한 10억4천950만 달러, 수입은 27.1% 늘어난 14억5천950만 달러였음. 무역액으로



는 27.9% 늘었음. 지난해 북한의 전체 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9.1%에 달함. 2004년 48.5%였던 대중 의존도는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 2009년 78.5%, 2010년 83.0%로 꾸준히 높아짐. 올해 대중 수출은 무연탄이 주도했음. 1~5월에 6억1천376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2% 증가함. 대중 수출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2010년 초 4%도 안됐지만, 같은 해 4월 이후 늘기 시작해 40% 안팎으로 불어난데 이어 올해엔 지난 4월 64%를 넘는 등 줄곧 50%를 웃돌았음.

-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 등 연료(3억6천445만 달러, 18.7% 증가), 기계류(1억3천248만 달러, 34.8% 증가), 차량 및 부품(1억916만 달러, 34.8% 증가), 전기기기(1억574만 달러, 7.2% 증가), 플라스틱(5천718만 달러, 50.0% 증가) 등임. 1~5월 대중 무역적자는 4억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2.7% 늘었음.
- 김 위원은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원자재, 전략물자, 생필품 등 필요한 물자를 대중 수입으로 충당하려면 무연탄 등 지하자원을 과도하게 수출할 수밖에 없다. 대중 수입이 늘수록 동시에 대중 수출도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진단함. 무연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북한에는 산업과 수출기반이 없는 만큼 외화벌이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그는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구잡이식 지하자원 수출에 제동을 걸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같은 대외환경이 계속된다면 지하자원 수출로 외화부족을 해결한다는 처방이 당분간 지속하고 북중 무역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 中, 북한군 탈출 대비 국경경비 강화(7/22)

- 중국군이 북한군 병사와 항공기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함. 이 신문은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 뉴스센터'를 인용해 중국군이 지난 17일부터 북한 병사와 항공기의 탈출을 막으려고 조기경보기 4대를 북-중 접경지대에 증파해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전함. 이와 함께 지린성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는 17일 이후 북한군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한 긴급 훈련을 8회에 걸쳐 실시함. 중국인권민주화운동 뉴스센터는 "북한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이 평화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중국이 입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함. 리영호는 지난 15일 북한 노동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됐고, 18일에는 인민군의 총참모장직에서도 물러났음.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리영호 해임 당시 북한군 내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충돌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재 분석 중이다"라고 전함.



라. 일·북 관계

● 日, 北 여자 축구 대표팀에 비자 발급키로(7/16)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여자 축구 대표팀에 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16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축구 여자 U-20(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단에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해 '제재의 예외'를 인정함. 정부는 선수를 포함해 최대 100명 정도까지 입국을 허용할 방침임.
-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후 최대의 예외 허용임.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뒤 핵실험을 유보한 것을 중시해 선수단을 받아들이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함.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입국 수속도 과도하게 하지 않는 등 배려하기로 함. 이런 방침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마. 기 타

● "北, 2020년까지 장거리미사일 개발 어려워"(7/16)

- 북한이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202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러시아 군사기술 전문가가 전망함.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는 지난 5월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유럽에 대한 현존 및 잠재적 미사일 위협' 제하의 논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됨. 이 논문은 러시아 국방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돼 있음. 예브세예프 소장은 논문에서 "북한에서는 현재 대포동 미사일과 유사한 2단 및 3단 탄도미사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6천km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충분한 재정 지원 부족과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 및 1874호로 인한 물자 기술적 기반 낙후로 인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완수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함.
-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 중인 미사일의 비행설계 실험 추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사거리 5천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전망함.
- 예브세예프는 "북한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까지의 거리가 7천752km인 점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유럽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함.
-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



로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미사일 방어(MD)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망이 자국 핵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예브세예프 소장의 논문은 서방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당분간은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임.

- 예브세예프 소장은 해당 논문에서 화성-노동-대포동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도 상세히 소개함. 그는 북한이 이집트를 통해 수입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토대로 화성 5호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이래 현재 이보다 훨씬 향상된 중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대포동 2호는 탄두 중량 1t일 경우 3천500km, 탄두 중량 500kg일 경우 6천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함.

● 정부 "北 식량차관 침묵에 유감"..상환 재촉구(7/16)

- 정부는 16일 북한이 상환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측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 정부는 또 지난 6월8일에 이어 북측에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다시 발송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측이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식량차관 첫 원리금 583만4천달러)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측의 상환촉구 통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대북 식량차관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힘. 정부는 이날 오전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 조선무역은행총재 앞으로 팩스로 발송함. 또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DHL로도 보냈음. 북측이 지난달 보낸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이날부터 발생했음. 김 대변인은 "북한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시 상환 촉구 절차를 거치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라고 설명함.
-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음. 총 7억2천4만 달러 규모로서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임. 북측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천532만 달러를 갚아야 함. 이 가운데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 옥수수 20만t, 8천836만 달러)의 첫 상환 분 583만4천372달러의 상환기일이 지난달 7일 도래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임.

● 정부관계자 "리영호 해임은 정치적 숙청"(7/17)

- 정부 관계자는 17일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에 대해 "김정



은 체제의 권력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숙청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리영호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타 부처 업무에 간섭하는 등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군 인사·통제권을 두고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마찰을 빚자 해임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민간인 출신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최룡해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신군부의 상징인 리영호에 대해 치밀한 내사를 진행, 비리를 적발해 숙청한 사건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다."고 강조함.

- 그는 "정통 당 관료 출신인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과 군의 외화벌이 기구의 내각 이관, 김정은 군부대 방문 감소 등에서 '군부 힘 빼기'의 작업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말함.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신군부 세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조치"라면서 "당 정치국 회의 명의로 당직을 해임한 것은 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그는 김정은 1위원장이 2009년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최근까지 20여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이 리영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고 전함.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 3월 간첩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전 당 계획재정부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한 사실이 탈로나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홍석형 전 경제담당 비서 등이 대표적임. 또 2011년 1월 간첩죄로 처형된 류 경 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지난 3월부터 사라진 우동측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총참모장에 이어 4군단장에서도 밀려단 김격식 등도 마찬가지임. 리영호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으로 앞으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 충성경쟁과 눈치 보기가 심화하는 이중적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그는 전망함.
- 이에 따라 북한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 개선 시도가 신군부세력 등 변화 거부세력의 위축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지부동에 따른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 관계자는 리영호의 해임에 불만을 품은 군부 세력이 수세국면을 탈피한 후 반격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정치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는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누구보다 신변 불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면서 향후 돌출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北, 재북가족 이용 박인숙씨 재입북 협박"(7/17)

- 지난 5월 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박인숙씨의 재입북 과정에서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힘. 통일부 당국자는 "박 씨는 재북 가족의 안위를 우려해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입북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관계기관 조사 결과,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위협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함. '탈북여성 1호 박사'로 알려진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박 씨의 재입북 후 "박씨가 4월에 북한에서 걸려온 협박전화를 받고 괴로워했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박씨의 과거 탈북과정에서 남



측이 유인, 납치했다는 북측의 주장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면서 "북측은 비인도적 행위(탈북자 위협)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2만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주요외신>(7/18)

-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로 승진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그가 군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권력을 굳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로이터통신은 18일 김정은의 원수 승진에 대해 "화려한 직함을 하나 더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도함. 이 통신은 이미 노동당의 최고 자리에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새 타이틀을 달면서 그의 승진은 완성됐다"고 평가함.
- 로이터는 또 20대 후반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부에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리용호 총참모장을 해임했다는 사실도 전함.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사후 최고 지도자가 된 지 7개월 만에, 총참모장을 해임하고 며칠 후 최고 계급인 원수에 올라 "북한에 대한 장악을 굳혔다"고 보도함. 블룸버그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권력 이양이 예상보다 부드럽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와이호우룽 바클레이즈캐피털 선임경제학자의 분석을 소개함. 교도통신은 김정은의 승진이 "최근 총참모장을 해임했지만,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으며 AFP통신도 "권력 장악을 더 강화한다는 조짐"이라고 보도함. AFP는 관련 기사에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맡은 역할을 이어받아 왕위의 정통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함. AP통신은 김정은이 120만 병력의 북한군에 중요한 변화를 주면서 원수에 올라 자리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음. 북한 전문가인 존 들루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리용호가 물러난 뒤라 중대성이 더 크다. 타이틀은 물론 권위를 보증하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P에 말함. 한편, BBC 방송은 김정은이 아버지가 그랬듯이 "군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려고 계획하고 권력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도함. 아시아퍼시픽글로벌리서치그룹의 재스퍼 김은 김일성에게 충성한 "나이 든 이들을 배제하고 북한 지도부를 새 인물들로 교체하는 재건설"이라고 BBC에 말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근래 군 인사들이 노동당의 요직을 다수 차지했지만, 김정은의 승진과 참모장 교체 등으로 볼 때 이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함.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과시하고 당과 군의 많은 원로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함.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널리 여겨진다면서 전문가들은 그가 최근 총참모장을 교체한 것도 "노동당의 강해진 영향력으로 군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굳히려 의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CNN은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가 "북한 군부와 민간 엘리트 사이 권력 싸움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함.

● 北현영철 신임 총참모장 주석단 서열 5위?(7/20)

- 북한의 신임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이 주석단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호명됨.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20일 평양시체육관에서 전날 열린 '김정은 원수' 추대 경축행사 소식을 전하며 주석단 고위간부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순으로 소개함. 북한 매체는 보통 주석단을 공식적인 권력서열 순으로 호명함.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포함하면 현영철은 주석단 서열에서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정권 들어 노동당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매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등 순으로 호명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에 따라 현영철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했던 리영호와 마찬가지로 노동당에서 고위 직위를 추가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것으로 추정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영철이 최룡해 다음으로 불렸다는 것은 현영철이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았거나 곧 맡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며 "김정은 시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 2명에게 주는 내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조선중앙TV에 포착된 장면에서 현영철은 최룡해의 바로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 앞서 리영호는 총참모장 직책만 맡고 있을 때는 주석단 서열에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에 뒤졌다가 2010년 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에 오른 뒤에야 김영춘 앞에 호명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한미 FTA발전에 美상의 노력 당부">(7/16)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음. 이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가 한미 FTA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미 FTA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이미연 청와대 외신대변인이 전함. 이에 대해 도너휴 회장은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한국 주재 미상공회의소 및 대한상의회와 협력해 한국에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FTA의 혜택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도너휴 회장은 또 "이 대통령이 한미 FTA가 체결되도록 안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힘. 도너휴 회장은 동북아시아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 중임.

● **美육군 공병사령관 방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의(7/17)**

- 미 육군 공병사령관 토머스 보스틱 중장이 방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 지난 15일 방한한 보스틱 사령관은 17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예방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지원과 협조를 당부함. 이 차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가 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미 공병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함.
- 보스틱 사령관은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미 공병사령부와 IMCOM-K(시설관리사령부 한국지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함. 그는 또 박계수 국방시설본부장과 만나 한·미 시설발전을 위한 협력증진방안, 인적·기술 교류 확대 등에 대해 협의했음.
- 오후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한 뒤 오는 18일 출국할 예정임. 한편 그는 지난 16일 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박보택(朴寶宅)'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받기도 함. 미 육군 공병사령부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군 조직임.

● **김국방 "전작권 전환 재검토단계 아니다"(7/20)**

-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요구와 관련, "현재로서는 (재)검토단계가 아니다"고 말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했는데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힘.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됐다"면서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함.
- 김 장관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하급 장교가 상급자를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재가 없이 구금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반란죄에 해당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함. 그는 그러나 '쿠데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라는 홍 의원의 확인질문에 "국방장관은 정치적 중립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착수(7/16)

- 한국과 중국 간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발생함.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정식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통보해왔으며 한국 정부도 그와 관련해 정식 대응에 나선. 중국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 점유율이 커진 데는 정상가격 이하의 덤핑 수입이 이뤄진 탓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내 담당 부처인 상무부는 자국 업체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핵심 원료로 한국과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이런 탓에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 한국의 기존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은 OCI와 한국 실리콘으로 올해 각각 4만2천과 1만5천을 생산할 예정이고, OCI는 2014년까지 생산량을 1만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도 신규투자를 통해 2014년부터 1만씩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같은 해 한국의 총 생산량은 8만7천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GCL과 LDK에서 올해 각각 6만5천과 2만5천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은 한중 양국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선두주자인 독일의 바커와 미국의 험록이 올해 각각 5만2천과 5만6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유럽 항공로 개선 협의(7/17)

- 국토해양부는 중국 민용 항공총국과 18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하이러얼에서 '제3차 한·중 항공교통관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힘.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A326과 G597 항공로 개선 방안, 양국 간 관제분야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로 함. 한국 측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차단되는 일이 많았던 A326 항공로의 우회항로 설정과 단선으로 운영되던 G597 항공로의 복선화 안전이 주요 논의 사항임. 국토부는 이번 회의 안전들이 잘 협의되면 양국 간 항공교통 흐름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한·중 항공교통 관계 협력회의 양국 간 관제분야 현안과 기술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음.

● <김영환, 밝은 표정으로 가족 품에 안겨>(7/21)

-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14일 만인 20일 귀국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21일 환하게 웃으며 가족 품에 안김. 김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 인천공항에 일행 3명과 도착해 건강검진과 함께 정보당국에서 체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0시



50분께 경기도 용인 자택에 도착함. 흰색 반소매 셔츠에 회색 정장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검은색 여행용가방 1개를 끌고 등에 가방을 멘 채 정보당국이 제공한 차에서 내린 김씨는 다소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음. 김씨는 체포이유와 석방조건 등을 묻자 "정보당국에서 중국 억류생활에 대해 당분간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말을 아꼈.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몸이 좋지는 않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괜찮다"고 짧게 답함. 그는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왔음. 그는 지난 3월29일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음.

다. 한·일 관계

● 김외교 "위안부 기림비 철거운동 반일감정 자극"(7/16)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방한 중인 일본 여당 의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미국 뉴저지주(州)의 위안부 기림비 철거운동 등이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함. 김 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민주당 내 '전략적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명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의 한 참석자가 전함. 김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과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계속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마에하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일 간 여러 현안이 있으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힘. 일본 외무상을 지낸 마에하라 회장 등은 지난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며, 류우의 통일부 장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면담을 가짐.

● 외교부 "위안부 영문표현 '성노예'로 변경 검토"(7/16)

- 외교통상부가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의 영문표현을 '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우리말 표현을 성노예로 변경하는 문제는 피해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다만 국제문서에 영문표현으로 'so called comfort women'(소위 위안부)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를 'sex slave'(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로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국내에서도 용어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



-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장관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함.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정대협측에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의 역사적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이 썼던 위안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문 표현을 성노예로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됨.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김 장관이 국회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것도 피해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함. 정부는 다만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의 영문 표현으로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식 영문 표현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짐. 이 관계자는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가 국제법 위반임을 설명할 때 'sex slave'라는 말을 쓰지만 대상을 지칭할 때는 'comfort women'으로 썼다"며 "이를 변경하는 문제를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요된 성노예였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은 것인데 국내에선 용어 문제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음. 유미향 정대협 대표는 "이제 와서 용어 변경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주장해온 내용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용어 변경이 아니라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함.

라. 미·중 관계

● 中외교부, 美에 "대만과 정부간 교류 말라"(7/2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미국에 대만과의 정부 간 접촉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홍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근래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대만을 방문해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비롯해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힘. 그는 미국은 중국과 약속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신중히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아울러 양안(兩岸) 관계와 중미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해칠 어떤 형식의 미국과 대만 정부 당국 간 교류를 중단하라고 주장함
- 중국의 이런 반응은 미국이 남·동 중국해 분쟁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더러 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중국은 지난 5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친(親)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과의 정치 분야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중국은 근래 조어도(중국명 다포위다이·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대만과의 '공조'를 희망하지만, 대만은 거리를 두고 있음. 대만의 마잉주 정권은 내



부 반발을 우려해 '비통일, 비독립, 무력불사용(不統, 不獨, 不武)'의 현상을 유지하고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이라는 '1992 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 **美 국토안전부, 대만 국적표기 허용(7/22)**

- 미국 국토안전부가 대만 국적표기를 허용함. 22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만 권익단체인 대만인공공사무소(FAPA)는 미국 국토안전부가 미 의회 인사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국신고서(I-94)에 국적을 '대만(Taiwan)'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 대만인들은 미국 측의 규정에 따라 미국 입국 때 '중국대만(China-Taiwan)'이라고 국적을 써 왔음. 이런 규정 변경을 주도해온 하워드 버먼(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대만을 대만으로 부르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정책 원칙"이라고 강조함. 앞서 일본은 지난 9일부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재류카드' 국적·지역 난에 대만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함. 이와 관련,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한 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日, 美 국방부에 자위관 파견(7/17)**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7일 보도함. 이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의 하나로 유사시 양국의 공동 대처 능력을 높이는 취지임. 아울러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핵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을 견제하면서 유사시 초동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미국 플로리다의 중앙군 사령부와 하와이의 태평양군 사령부에 자위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임. 일본은 우선 항공자위대의 영관급 장교 1명을 미 공군 참모본부에 연락관으로 상주시킨 뒤 단계적으로 파견 자위관을 늘려갈 방침임. 미 국방부에 상주하는 자위관은 매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 각종 작전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국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美, 신형 수직이착륙기 이달 23일 일본 배치(7/19)**

- 미국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형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를 이달 23일 일본에 배치함. 교도통신은 19일 미국 정부가 신형 수직이착륙기를 오는 23일 야마구치(山口)현의 주일 미군 이와쿠니(岩國)기지에 반입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함. 방위성은 이 같은 미국 측의 통보를 야마구치현과 이와쿠니시에 알릴 예정임. 하지만 야마구치현과 이와쿠니시는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의 사고 빈발을 들어 배치에 강



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주일 미군은 오는 10월 초순부터 오키나와(沖繩)현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에서 신형 수직이착륙기의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지만 오키나와도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러, 무기 밀매상 부트 귀환 "안 서두를 것"(7/17)

- 러시아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인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45)의 본국 귀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 판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법원에서 무기 밀매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트의 본국 귀환 문제를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코노발로프 장관은 "이것(부트 송환 요구)을 언제 미국 측에 제기할지의 문제가 전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며 "미국 정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열기가 식을 때까지 잠깐 휴식기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음.
- 미국의 입장은 미국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형기의 절반은 국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법무부가 아직 부트의 본국 귀환 요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힘. 코노발로프는 지난주 부트 귀환 청구 관련 서류들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었음. 이에 앞서 이달 6일 부트의 부인 알라 부트는 러시아 법무부에 부트 귀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함. 미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선 러시아 법무장관과 부트 본인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함. 또 부트의 본국 송환을 위해선 그가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지만 부트는 아직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
- 부트는 지난 4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밀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25년형을 선고 받음. 국제 테러단체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죽음의 상인'으로 불려온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합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았음. 러시아는 1983년 체결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조약을 근거로 부트의 본국 송환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음.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조약 가입국임.

사. 중·일 관계

● 주중 日대사 베이징 복귀... "교체 없다"(7/17)

- 닌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갈등 속에서 본국에 일시 소환됐던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 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복귀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7일 보도함. 일본이 지난 15일 니와 대사를 도쿄로 불러들인 것을 두고 닌오위다오 갈등과 관련해 중국



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그러나 기자들과 만나 니와 대사의 귀국이 중일 관계의 앞날을 상의하려는 것이지 중국에 대한 항의 차원이 아니라고 부인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겐바 외무상은 15일 니와 대사를 만나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중국에 전하라고 주문함.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사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없다"고 밝힘. 일본 정부가 이달 다오위다오의 일부 섬을 구입해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이 항의 차원에서 어정선(漁政船·어업 지도선) 편대를 다오위다오 해역에 진입시키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니와 대사는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를 심각히 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 추진하는 다오위다오 매입 운동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 일본 내 보수파로부터 공격을 받았음.

● 中 "어정선단, 조어도 순찰 후 복귀"(7/17)

- 중국 어정선(漁政船·어업 지도선) 선단이 일주일간의 조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순찰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함. 중국 농업부 어업국은 위정 202, 204, 33001, 35001호 등 중국 선박 4척이 10일부터 조어도를 포함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순찰하고서 16일 복귀했다고 밝힘. 조어도 순찰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해왔다고 덧붙임. 어업국은 조어도와 그 부속 도서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라며 어정선이 법률에 따라 담당 해역에서 휴어기 관리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조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어정선단의 조어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음. 중국 어정선단은 조어도 해역에서 11~12일 일본 순시선과 만나 설전을 벌여 관심을 샀음.

● "중국인 91%, 다오위다오 분쟁 군사력 동원 찬성"(7/19)

- 중국인 10명 가운데 9명꼴로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의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 군사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조사됐음. 19일 대만 중국시보가 중국 환구시보와 공동으로 대만과 중국 18세 이상 각각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응답자의 90.8%가 군사력 동원에 찬성함. 군사수단 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음. 대만인은 41.2%가 이 같은 물리력 동원에 찬성했고 31.6%는 반대했다.
-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인 응답자의 52.1%가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음. 같은 물음에 대해 대만인은 40%가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42.7%는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함. 다오위다오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대만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함. 중국인 85.3%가 양안 협력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만인은 51.5%가 양안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또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에서의 양안 협력에 대해선 중국인의 78.6%가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힘. 대만인은 같은 질문에 47.7%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함.

-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가 $\pm 2.5\%$ 포인트임. 다오위다오는 대만 북단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중국, 일본,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가 이 섬을 국유화하겠다고 나서자 중국 기업인이 당국에 다오위다오 임대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日的 조어도 상륙 허가 여부에 中 '촉각'>(7/22)

- 중국이 일본의 잇따른 조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강수를 면밀하게 지켜보며 '반격'을 준비하는 기색임. 일본 내 조어도 매입 운동과 일본 정부의 국유화 방침 발표에 이어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의 일시 본국 소환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중일 관계는 지난 16일 니와 대사의 '무사귀환'으로 일단 진정 기미를 보였으나 근래 다시 감정이 '격화'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조어도에 대한 국유화 절차 후 선박 피난이 가능한 항구와 등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게 중국을 자극함. 아울러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는 조어도 상륙 허가 신청을 자국 정부에 냈고 민주당과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를 위해 다음 달 중순 조어도에 가겠다는 견해를 밝힘.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도쿄도가) 적정한 목적으로 상륙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로서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허용 의지를 밝혀 관심을 샀음.
- 이에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2일 "일본 정부의 (도쿄도와 일부 의원들의 대한) 상륙 허가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고 그러면 중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올해 들어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모금 운동을 통해 조어도 매입 '여론몰이'를 해왔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가세해 아예 국유화하겠다고 하자 중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과 더불어 '대응' 주문이 잇따르고 있음.
- 중국의 민간기업인인 통쟁(董增)은 다오위다오와 부속도서를 임대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며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도서관리관공실에 정식으로 임대 신청서를 냈음. 하오권보(〈赤에 우부방〉俊波)라는 베이징(北京)의 변호사는 20일 일본 정부의 조어도 국유화 방침이 중국 주권 침해라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제소함. 지난 1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대만 중국시보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91%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어도 영토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지속해 왔음. 그럼에도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자제'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14일 저장(浙江)성 닝보(寧波)항에 모여 일본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조어도 상륙을 시도하려던 중국 내 활동가 그룹의 출발을 저지한 게 단적인 사례임.



중국의 조어도 담당 당국인 농업부 어업국이 지난 10~16일 4척의 어정선(漁政船·어업 지도선) 선단을 보내 조어도 순찰을 벌였으나 일본 순시선과 두 차례 마주친 것 이외에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이런 가운데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간 '관망' 해온 중국이 조만간 강수를 낼 것으로 점치고 있음.

- 이시하라 도지사가 도쿄도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자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조어도 상륙을 하게 돼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면 앞으로 조어도 주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해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조어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를 절대로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갈 것이지만,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조어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민간인의 상륙 시도에 맞춰 대응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아. 중·러 관계

● 前.現유엔총장, 러·中정상접촉·시리아논의(7/16)

-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 유혈사태 종식의 중대 변수인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방문함. 크렘린 공보실은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코피 아난 유엔 및 아랍연맹(AL) 시리아 공동 특사와 17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힘. 직전 유엔 사무총장인 아난 특사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아난 특사의 시리아 사태 중재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할 계획이라고 공보실은 설명함.
- 크렘린 공보실은 러시아는 아난 중재안이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베이징(北京)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함. 한 유엔 당국자는 반 총장이 중국 지도급 인사들과 만날 때 시리아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함. 반 총장은 후 주석 외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양제츠(楊潔之<兼대신虎 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 임.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 중지와 평화적 정권이양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 이견을 빚고 있음.

● <어선포격, 중러관계 시험대에>(7/21)

- 밀월 시기를 구가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선 포격' 사건을 놓고



시험대에 오른 양상임.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중러 관계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음. 불법 조업하던 어민의 실종을 계기로 중국 안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들끓자 이에 등을 떠밀린 중국 정부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또한 적법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음. 중국과 러시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5일과 16일 동해 나훗카항 인근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잇따라 국경수비대 경비함에 나포됐음.

- 문제가 된 것은 16일 나포된 루룽위(魯榮漁)80-117호였음. 이 어선은 경비함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3시간이나 도주 행각을 벌임. 공포탄 발사에도 중국 어선이 계속 도주하자 러시아 경비함의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음. 포탄이 어선 측면에 떨어지는 가운데 긴박한 추격전이 계속됐음. 중국 어선은 진로를 가로막는 경비함 뱃머리에 충돌한 후에야 비로소 나포됐음. 기관포 발사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으나 어선이 나포된 이후 루룽위호의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즉시 수색작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생존 가능성은 희박함. 루룽위호는 자기 선원이 실종됐는데도 러시아 경비함이 구조에 나선 틈을 타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가 제지당함. 중국 정부가 실종자 발생을 정식으로 확인한 것은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19일이었음. 사건 초기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던 중국은 자국민 실종이 확인되자 강경 모드로 돌변함. 외교부 청귀평(程國平) 부부장은 19일 러시아 임시 대사를 초치해 러시아의 단속을 '난폭한 법집행'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강렬한 불만'을 전함.
-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포된 어민들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에 들어갔음. 자국의 EEZ에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임. 중국이 러시아 임시대사를 초치한 것에 비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등 차분한 반응을 보임.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루룽위호 선장 치우샤오밍(邱曉明)과 15일 나포된 저타이위(浙臺漁)8695호 선장 신치(新旗)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함포 사격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는 여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끝에 결정된 것이 라면서 실제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어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 당국이 당분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함. 중국인들은 자국 어민들이 주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분쟁을 일으킬 때 무조건 자국 어민을 편들면서 합법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변국 당국을 비난하는 경향이 뚜렷함. 중국 외교부는 실제로 타국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자국 어민들의 행태를 잘 알면서도 국민 여론에 떠밀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문명 집행을 하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펴왔음.
-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막 취임한 러시아가 중국의 국내적



요구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양국 간에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 행각까지 벌인 중국 어선에 '월죄'가 있고, 중국 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사건이 중·러 양국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일·러 관계

● 일·러 외무장관 회담 28일 소치서 개최(7/20)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28일 러시아 소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0일 밝힘. 각료 취임 후 이번이 첫 러시아 방문인 겐바 외무상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회담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본 교도 통신은 겐바 외무상이 영토 문제 외에 평화조약 체결, 극동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북한과 이란 핵문제 및 시리아 상황 등 광범위한 국제문제를 거론할 생각이라고 보도함. 소식통들은 겐바 외무상이 이번 러시아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이들은 겐바 외무상이 27일 소치에 도착해 3박4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후 30일 도쿄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함.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달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계 강화에 합의함.

차. 기 타

● 시리아 해법, 서방-러시아 갈등 계속(7/18)

- 시리아 반군의 자살폭탄테러로 국방장관 등 고위관리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서구와 러시아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미국과 프랑스 등은 시리아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서방이 반정부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사태가 급속히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폭력 사태가 심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
- 패네타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그만 물러나고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시작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프랑스도 이번 사태가 신속한 정권이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면 권력을 유지하려는 헛된 움직임을 포기하라고 아사드 대통령을 압박함.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그 정도에 비춰볼 때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함. 베르나르 발레로 외무부 대변인도 "시리아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아사드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헛된 노력이며 어떤 것도 시리아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영국 외무장관은 서방이 제안한 유엔헌장 7장을 반영한 시리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함. 윌리엄 헤이그 장관은 "시리아 사태가 분명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회원국은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AL) 시리아 공동특사의 중재안 이행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고 호소함. 서방은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에 대한 추가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임. 그러나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에서 허용하는 군사개입은 담고 있지 않음.

- 반면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서방이 오히려 시리아 반정부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며 비난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에서 중요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사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만큼 반문을 지원하는 것은 막다른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함. 라브로프 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반군을 진정시키는 대신 계속 자극하고 있다"며 반군을 지원하는 건 더 심한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함. 한편 시리아 반군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가안보 기구 건물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함. 이 공격으로 전·현직 국방장관과 집권세력 내 핵심인물인 아사드 대통령의 매형이 숨짐.

● <中, 남중국해서 인해전술' 구사...충돌위험 고조>(7/19)

- 중국이 남중국해를 '인해전술'로 장악할 전략을 세운 기색임. 중국은 지난 12일 사상 최대 규모인 30척의 어선단을 조직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썬영사 군도)로 보냈고 해당 선단은 일주일째 조업 중임. 140t 이상급 어선 29척과 3천급 보급선 1척으로 구성된 이 선단은 중국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전시성' 선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 해당 선단 구성과 조업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남중국해 출어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정부 처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차이나포커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어민이 이제 남중국해 어족 자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남중국해가 영유권 분쟁해역인 탓에 주변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국 어민들이 조업을 꺼렸으나 이제는 대형 선단을 구성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고기잡이에 나섰다. 중국이 올 들어 주변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사실상 남중국해를 담당할 행정기관인 산사(三沙)시를 설립하는 등 남중국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나서자 어족자원 부족에 시달려온 중국 어민들이 대거 '남하'하는 것으로 전해짐.
- 신화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량아페이라는 하이난(海南)성 어민은 "과거에는 외국 해양감시선에 나포될 게 두려워 남중국해로 가지 못했지만, 선단을 조직해가면 그럴 염려가 없다"고 강조함. 중국은 지난 4~6월 필리핀과의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 해상 대치 사건 때 10여 척에 불과했던 필리핀 선단에 맞서 어선을 포함해 100여 척의 선박을 보내는

